

공익제보자 13명에게 3398만 원 지급

경기도, 제3차 공익제보지원위 개최
허위 공사비 청구 등 위반 행위 적발

경기도가 내부 공익신고자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가운데 공익제보를 통해 도가 발주한 공사를 도급받은 하도급업체의 공사비 과다 보고를 적발했다.

도는 업체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공익제보자에게는 보상금 1427만 원을 지급한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8월 2022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1건 1427만 원과 포상금 12건 1971만 원 등 총 3398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에게 공사를 도급받은 A건설은 B건설사에 일부 공정을 하도급 했고, B건설사는 시멘트 442톤을 과다 보고해 기성금(공사 중간에 공사가 진행될 만큼 지급하는 금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비실명대리신고로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접수된 제보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시멘트 자재비 4759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 도는 또 B건설사의 불법 재하 도급과 공사비 편취 혐의도 의심되며 관련 증거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 현재 B건설

공사비를 허위로 청구한 건설업체 제보	보상금 1,427만 원
국유지 내 건설폐기물 불법 보관 행위 제보	포상금 810만 원
소방공사 관련 불법 행위 제보	포상금 392만 원
경기도 공익제보 전달신고 창구 공익제보 핫라인 공식 누리집(hotline.gg.go.kr) 또는 상담전화(031-8008-2580) 내부신고자 익명 제보 시 변호사(hotline.gg.go.kr/lawyer)를 통해 대리 신고 가능	

경기도 공익제보 포스터

경기도 제공

사 직원 등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장성근 도 공익제보지원위원장은 “건설업체 체 직원이 용기를 내 제보를 사함으로 증거 자료의 신빙성이 상당하다”며 “공정한 건설 문화 정착과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한 제보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경기도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도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상한액 없이 신고로 회복·증대된 재정수입의 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도는 해당 사건의 내부신고자에게 공사비 환수금액 4759만 원의 30%인 1427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또 환경오염 분야 신고 9건, 도민의

안전을 위협한 내용 신고 3건에 대해 포상금 1971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C씨는 국유지에 건설폐기물이 무단 보관돼 있는 현장을 사진과 함께 제보했다. 이 제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적발돼 과징금 2500만 원과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이 이뤄졌다.

위원회는 도양오염 방지 등 공익 증진을 가져온 제보자에게 포상금 81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D씨는 위험물 제조업체가 증축공사를 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포 소화약제를 쓴 사실 등을 제보했다. 위험물 제조시설의 화재와 인명피해를 예방한 D씨에게는 포상금 392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위반행위를 제보한 10명에 691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익제보를 원하는 사람은 공익제보 전달신고 창구인 ‘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신고할 수 있다. 공익침해행위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는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해서 신고하는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이용할 수 있다.

김기용 기자



경기도가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투자유치 협력 간담회를 개최한 후 기념촬영을 했다.

경기도 제공

북부 10개 시·군과 공동 투자유치 나서

경기도, 담당부서와 협력 간담회
바이오·미래차 신산업분야 중점

경기도가 경기북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북부 10개 시·군과 국내의 신산업 분야에 대한 공동투자유치에 나선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1일 경기도 북부청사(의정부)에서 북부 10개 시·군 투자유치 담당부서와 투자유치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양·남양주·파주·의정부·양주·구리·포천·동두천·가평·연천의 투자유치 담당부서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도는 이 자리에서 민선 8기 투자유치 방향과 전략을 발표하고, 투자유치 과정에서 유의할 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산업생태계와 기반 시설이 부족한 북부지역에 대해 기존에 운영 중인 펀드·기금 등을 활용해 바이오, 미래차 등 신산

업 분야 새싹기업을 유치하는 생태계 기반 조성을 제안했다.

시·군은 투자유치 경험 부족과 각종 개발사업 관련 투자자 검증 애로 등을 토로하며 앞으로 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도는 민선 8기 경제 회복 방안의 하나로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

또 매년 2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에 성공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활용해 민선 8기부터 ‘찾아가는 시·군 투자유치 컨설팅’ 서비스를 운영, 투자자 검증과 투자계획의 적정성 등을 자문하고 있다.

이민우 도 투자진흥과장은 “민선 8기 목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민간투자를 통해 활력을 회복하는 것이므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투자유치활동이 중요하다”며 “경기도의 투자유치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해 시·군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경제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용 기자

미등록 캠핑장·글램핑장 단속... 20곳 중 10곳 덜미

경기도 특사경, 불법 행위 업주 적발
미신고 기타유원시설업 운영 6건 등

캠핑장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거나 캠핑장 내 건물을 이용한 미신고 숙박업·식품접객업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야영장 업주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도내 캠핑장과 글램핑장 20곳을 단속한 결과 관광진흥법 등을 위반한 10곳(11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미등록 야영장업 운영 2건, 미신고 기타유원시설업 운영 6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 1건, 미신고 숙박업 운영 1건,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 1건이다.

업주 A씨는 관할청에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않고 캠핑장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B씨는 관할청에 농어촌민박업 또는 숙박업 신고 없이 캠핑장 부지 내 조립식 건물을



야영장 불법행위 주요 사례.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등록 야영장업 운영과 미신고 숙박업 운영은 각각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기타유원시설업 미신고 운영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기도 제공

이용해 관광객에게 숙박을 제공하다 덜미를 잡혔다.

C씨는 야영장을 운영하면서 야영장 부지 내 봉봉뿔들과 에어바운스를 설치하고도 관할청에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했다.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고, 해당 부지의 면적이 40㎡ 이상이면 관할청에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를 해야 한다.

D씨는 관할청에 휴게음식점 신고를 하지 않고 부지 내 건축물을 이용해 카페를 운영하다 적발됐다.

김민경 도 민생특사경단장은 “이번 단속이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안전한 야외활동을 위해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사항도 지속적으로 단속하면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용 기자

경기도, 올해 재산세 5조 3869억 원 부과

지난해 대비 5394억 원 증가 규모
광명시 전년 대비 17.3% 상승해

경기도는 2022년 정가분 재산세로 5조 3869억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22년 7월과 9월 정가분 재산세를 합한 세액으로, 지난해 대비 11.1%인 5394억 원 증가한 규모다.

재산세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 5652억 원, 용인시 5027억 원, 화성시 4593억 원 순이다. 전년 대비 재산세 상승률은 광명시 17.3%, 오산시 17.2%, 하남시 15.8% 순이다.

도는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지가 상승과 신축으로 인한 재산세 부과

대상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 23.2%, 개별주택 6.53% 상승하고, 토지 공시지가가 9.6% 상승한 점도 부과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 같은 변화에 따라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6월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했다.

주택별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경우 특례세율이 적용돼 최대 50%까지 중복 인하된다. 이에 도내 1주택자 254만 호가 실질적으로 총 3998억 원의 세액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용 기자

평택도시공사

첨단산업의 큰 길 평택 포승(BIX)지구로 통합입니다!

수도도시 중심 지구!
경기경제자유구역 핵심지구 '평택 포승(BIX)지구'
동북아의 중심이 되는 천혜의 자리에 국제 수준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그리고 높은 투자가치까지 선택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평택도시공사 공고 제2022- 119호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BIX)지구 상업, 근린생활, 주차장, 단독주택용지 공급 공고

■ 공급 대상

사업지구	용도	필지	면적(㎡)	공급예정가격(천 원)	공급 방법
평택포승 (BIX)지구	단독주택	1	238	332, 387	경쟁입찰
	상업시설	8	1, 106~1, 977	2, 556, 588~4, 281, 720	
	근린생활	13	681~1, 122	2, 556, 588~4, 281, 720	
	주차장	6	1, 158~3, 852	734, 950~2, 201, 850	

■ 공급 일정

구분	일정	장소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2022. 10. 17. (월) 10:00 ~ 10. 20. (목) 17:00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 www.onbid.co.kr)
개찰	2022. 10. 21. (금) 09:00	
낙찰자 발표	2022. 10. 21. (금) 18:00 이후	평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계약 체결	2022. 10. 31. (월)~11. 02. (수) (10:00 ~ 16:00)	평택도시공사 분양보상처 (평택시 도일유통길 25 1층 분양사무실)

※ 세부내역은 공급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 http://www.puc.or.kr - 분양안내 - 용지분양 게시판
전화문의 : 031-611-5115(평택도시공사 분양보상처)